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2007. 12

통일정세분석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2007. 12

여 인 곤 (동북아연구실장)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러시아 총선 과정	2
1. 총선이전 상황	2
2. 선거전 양상	4
III. 러시아 총선 결과와 평가	8
1. 총선 결과	8
2. 총선 평가	11
IV. 러시아 대내외정책에 미칠 영향	13
1. 대내정책에 미칠 영향	13
2.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	15
V. 정책적 고려사항	18

I. 문제제기

- 러시아는 ‘강한 러시아’ 건설을 주창하여 대통령에 선출(2000.3)된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발전시켜 왔음.
- 재선(2004.3)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취임식(5.7) 때에도 정치안정과 경제발전 및 평화를 사랑하는 강력한 국가를 강조하였음.
 - 연방하원인 국가두마(State Duma)에서 친여당 의석은 약 72%에 달하고 있음.
 - 러시아는 2001년 이후 6~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세계 3위에 해당하는 4,5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2007.11 현재)를 자랑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는 현재 실용주의, 예측성, 국제법의 우위라는 세 가지의 대외정책 원칙을 가지고 전방위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에서는 제5대 국가두마 선거(2007.12.2)가 실시되었음.
 - 「러시아연방 중앙선거위원회」는 총선 2주일 후 최종결과를 공식 발표(12.16) 하였음.
- 본 보고서는 러시아 총선 과정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하며, 이번 총선 결과가 러시아 대내외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II. 러시아 총선 과정

1. 총선이전 상황

- 구소련시대에는 「공산당」이 유일 정당이었으나, 소련 붕괴(1991.12) 이후 서구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개혁을 지지하거나 소련시대로부터 유래된 강력한 중앙정부의 유지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등장하였음.
- 1990년대 국가두마 선거들(1993, 1995, 1999)은 개혁적 정당들을 분열·약화시켰기 때문에 정치집단들의 이합집산에 따라서 정당 구성이 자주 변화되었음.
 - 2001년 「통합러시아당」, 「민주당」, 「평화와 단합당」 3개 정당이, 2002년 「공산당」, 「우파연합」, 「자유민주당」 등 12개 정당이 「러시아연방 중앙선거위원회」에 등록을 하였음.
- 친여 「통합러시아당」은 비공식적으로는 대중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갖고 있으나 중도를 표방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지원하는 정당임.
 - 이는 루즈코프(Yury Luzhkov) 모스크바 시장, 프리마코프(Yevgeny Primakov) 열친 대통령 당시 총리, 사이미예프(Mintimer Shaimiev) 타타르스탄공화국 대통령 등이 이끄는 「조국-전러시아당」과 쇼이구(Sergei Shoigu) 전 위급상황부 장관, 카렐린(Alexander Karelin) 전 레슬링 세계챔피언 등이 이끄는 「러시아단합당」의 합당으로 창설(2001.4) 되었음.

- 「통합러시아당」은 국가두마에서 푸틴 정부의 국정수행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왔음.
 - 제4대 총선(2003.12.7)에서 「통합러시아당」은 국가두마 총 450석¹⁾ 중 223석(정당비례 120석, 지역선거 103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였음.
 - 이는 제2위를 차지한 「공산당」의석(52석)의 4배를 상회하는 것이었음.

- 제4대 총선 이후 2006년 중반까지 「통합러시아당」은 의원들의 정당 소속 변경으로 86석을 더 늘여 309석(69%)이 되었고, 「공산당」은 45석(10%), 극우민족주의 「자유민주당」은 35석(8%), 지역정당들의 연합체인 「모국」은 29석(6%), 보수적인 「국민당」은 12석(3%), 무소속은 18석(4%)을 유지하였으며, 공석이 2석이었음.
 - 국가두마의 여성의원은 45명(10%)이었음.

- 푸틴 대통령은 국가두마 진출 정당수를 축소함으로써 정당제를 강화한다는 구실 하에 집권 「통합러시아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개정(2005.4)하였음.
 - 새로운 선거법은 총선에서 지역선거를 폐지하여 국가두마 대의원 450명 전원을 정당비례에 의해서만 선출하도록 하고, 의회 진출이 가능한 정당의 최소 유효 득표율을 기존의 5%에서 7%로 높였음.

1) 당시 선거법에 의하여 225석을 정당비례로, 225석을 지역선거로 선출하였음.

2. 선거전 양상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처음 실시된 이번 선거에는 「통합러시아당」과 「공산당」, 「자유민주당」, 「우파연합」 등 11개 정당들이 참가하였음.
 - 15개 정당들이 참가할 수 있었으나, 「러시아 애국자당」과 「러시아 부활당」은 연대를 함으로써 14개 정당들이 「러시아연방 중앙선거위원회」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였음.
 - 그러나 환경중시 정당인 「녹색당」은 지지자들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민족주의 「국민연합」은 「공산당」지지를 선언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결국 11개 정당이 선거전에 참가하였음.
 - 2003년 제4대 총선에 23개 정당이나 난립한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에 11개 정당이 참여한 것은 개정 선거법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약 80% 가까운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던 푸틴 대통령은 이미 「통합러시아당」 당대회(2007.10.1)에서 “비례대표 1번을 맡아 여당의 선봉에 서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 각 정당들의 공식 선거운동을 위해 약 1개월의 기간(11.3~29)이 주어졌음.
 - 선거운동 기간 동안 「통합러시아당」은 ‘푸틴 대세론’으로 승리를 굳히려한 반면, 야권은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 의도를 경계하면서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였음.
 - 푸틴 대통령을 ‘짜르(러시아 황제) 푸틴,’ 러시아 민주주의를 ‘짜

르 민주주의’라고 비판하는 서방 국가들도 총선 과정을 예의주시했음.

○푸틴 대통령은 여당의 압도적 승리가 자신의 임기 이후 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자신의 영향력 유지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 그는 자신의 지지 행사(11.21)에서 반대 세력들을 러시아의 약화와 분열을 희망하는 서방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재갈’(jackal)에 비유하는 한편, “국민들은 크레믈린이 지지하는 다수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각종 부정선거 행위가 노골적으로 행해졌음.

- 러시아내 3개 국영채널이 전체 뉴스시간 중 약 17%를 『통합러시아당』에 할당했음.

- 연금수령자들이 자신의 표를 100~200루블에 팔았음.

- 야당 당원들이 연행되고 선거홍보물이 압수되었음.

○자유주의 성향의 야당인 『우파연합』은 푸틴 대통령과 『통합러시아당』을 가장 비난하는 한편, 푸틴 대통령의 총선후보 자격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제소했다가 기각 당했음.

- 『우파연합』은 차기 대선(2008.3.2) 후보로 열린 대통령 시절 부총리를 지낸 넴초프(Boris Nemtsov)를 선택(2007.11.23)했음.

○러시아 경찰은 야당 세력이 총선을 앞두고 주도한 집회를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야당 인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다수를 체포

했음.

- 야당의 대선후보로 체스 세계챔피언이었던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 등이 주도한 모스크바 집회(11.24)에서는 60여명이 연행되었음.
- 「우파연합」 등이 주도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집회(11.25)에서는 넴초프를 포함한 200여 명이 체포되었음.

○ 또한 푸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의 반정부 움직임을 서방국가 또는 자본가에 의한 음모로 간주하면서 서방에 대해 러시아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촉구함으로써 서방과 갈등을 야기하였음.

- 선거유세를 위해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11.26)한 푸틴 대통령은 “최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러시아 총선 감시활동 철회 결정이 미국 국무부의 권유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음.

○ 푸틴 대통령은 선거 3일 전 국영 TV ‘채널 1’을 통해 방영된 선거방송에 출연(11.29)하여 여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했음.

- 그는 “「통합러시아당」을 위해 12월 2일 투표장으로 가주길 바란다. 이번 총선 결과가 내년 3월 대선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음.

○ 선거운동 금지기간(11.30~12.2) 동안에도 대부분의 선거부정이 「통합러시아당」에 의해 이루어졌음.

- 대다수의 다른 당들이 선거 현수막을 흰 종이로 막은 반면, 모스크바 시내에 「통합러시아당」의 현수막은 그대로 내걸려 있었음.

- 투표일을 3일 앞두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통합러시아당」은 60~70%의 지지율을 보였고, 나머지 10개 정당 중에는 공산당 등 2~3개 정당만이 원내 진출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따라서 이번 선거는 총선이라기보다는 푸틴 대통령이 주도한 8년간의 정책을 평가하는 국민투표의 분위기였음.
- 국민들은 총선보다는 오히려 푸틴 대통령의 3선 연임 가능성과 대선 이후 그의 행보에 더 큰 관심을 보였음.

Ⅲ. 러시아 총선 결과와 평가

1. 총선 결과

- 제5대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12.2)가 전국 95,000여 투표소에서 실시되었음.
 - 러시아 총유권자는 1억914만5,517명으로 168만여 명의 해외거주 러시아인도 358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였음.

- 11개 정당에서 지정한 감시단과 해외에서 초청된 약 400명(OSCE로부터 330명) 등 총 150만 명의 선거감시단원들이 주요 투표장에서 선거감시 활동을 펼쳤음.
 - OSCE는 러시아 총선을 위해 대규모 선거감시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비자발급 지연 등에 대해 러시아 정부를 비난한 이후 이 계획을 중단하고 330명만을 파견하였음.
 - 「상하이협력기구」(SCO) 소속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옵서버들이 모스크바시 선거구에 있는 30개 지역선거위원회들을 시찰했음.

- 「러시아연방 중앙선거위원회」의 공식발표(12.16)에 의하면 총유권자 중 6,953만7,065명이 선거에 참가하여 63.71%의 투표율을 보였고, 이 중 유효표는 98.91%임.
 - 2003년 총선의 투표율은 55.75%이었음.

- 개표결과 친여 「통합러시아당」이 64.30%, 「공산당」이 11.57%,

「자유민주당」이 8.14%, 「공평 러시아당」이 7.74%를 각각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서 7%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농업당」, 「야블로코」등 7개 군소 정당들은 국가두마 진입에 실패하였음.

○이 결과 국가두마 450석 중 「통합러시아당」이 315석, 「공산당」이 57석, 「자유민주당」이 40석, 「공평 러시아당」이 38석을 각각 할당받았음.

- 제5대 총선 결과의 정당별 의석수를 제4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I-1> 러시아 제4~5대 총선 결과의 정당별 의석수 비교

당명	제4대 총선(2003.12.7)			제5대 총선(2007.12.2) 의석수 (정당별 득표율 %)
	정당비례 의석수 (정당별 득표율%)*	지역선거 의석수	합계 (의석비율 %)	
통합러시아당 (United Russia)	120 (37.57)	103	223 (49.6)	315 (64.30)
공산당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40 (12.61)	12	52 (11.6)	57 (11.57)
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ic Party of Russia)	36 (11.45)		36 (8.0)	40 (8.14)
공평 러시아당 (Fair Russia)				38 (7.74)
모국 (Motherland)	29 (9.02)	8	37 (8.2)	
국민당 (People's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 (1.18)	17	17 (3.8)	

야블로코 (Yabloko)	- (4.30)	4	4 (0.8)	- (1.59)
러시아부활당·러시아생활당 (Party of Russia's Rebirth Russian Party of Life)	- (1.88)	3	3 (0.6)	
우파연합 (Union of Right Forces)	- (3.97)	3	3 (0.6)	- (0.96)
농업당 (Agrarian Party of Russia)	- (3.64)	2	2 (0.4)	- (2.30)
위대한 러시아·유라시아 연합 (Great Russia-Eurasian Union)		1	1 (0.2)	
러시아 뉴딜·자동차 (New Deal-Automobile Russia)		1	1 (0.2)	
비즈니스발전당 (Business Development Party)		1	1 (0.2)	
시민의 힘 (Civilian Power)				- (1.05)
러시아애국자 (Patriots of Russia)				- (0.89)
러시아사회정의당	- (3.09)			- (0.22)
민주당 (Democratic Party of Russia)				- (0.13)
자기 추천		67	67 (14.9)	
공석		3	3 (0.6)	
합계	225 (100.00)	225	450	450 (100.00)

주: 기타 정당들은 1% 미만을 획득했고, 4.70%는 모든 정당들에 반대투표 하였음.

출처: Russian Election Commission, December 16, 2007 <<http://www.vybory.izbirkom.ru>>; "The Russian Federation Votes: 2003-04" <<http://www.rferl.org/specials/russianelection/archives/07122003.asp>>.

- 제4대 총선과 비교할 때, 「통합러시아당」은 92석이나 증가하여 전체 의석과반수를 89석이나 초과하였으나, 「공산당」은 5석, 「자유민주당」은 4석 증가에 불과하였음.
 - 「공평 러시아당」이 38석으로 국가두마에 새로이 진출하였으나, 이 당은 「모국」과 「러시아 연금자당」 및 「러시아 생활당」의 합당으로 창설(2006.10.28) 되었음.
 - 제4대 총선에서 17석을 차지하였던 「국민당」도 제5대 총선 이전에 「공평 러시아당」으로 합당(2007.4.14)하였음.

2. 총선 평가

- 이번 제5대 총선에서 친여 「통합러시아당」이 다수 국민들의 지지(64%)를 확보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2008.5)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총선 결과 러시아 국가두마는 1강(「통합러시아당」 70%) 3약(「공산당」 13%, 「자유민주당」 9%, 「공평 러시아당」 8%)의 원내의석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음.
- 그러나 국가두마 내에서 친푸틴 세력은 393석(약 87%), 반정부 좌파세력은 57석(약 13%)이라고 할 수 있음.
 - 극우민족주의 「자유민주당」의 당수인 지리노프스키(Vladimir Zhirinovsky)는 친정부 성향임.
 - 중도좌파인 「공평 러시아당」의 당수는 연방상원인 연방협의회(Federation Council)의장 미로노프(Sergey Mironov)로서 강력한 푸틴 대통령 지지자임.

- 이번 총선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만으로 실시되어 국가두마 내에서 군소정당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음.
 - 제4대 총선 결과 12개 정당과 무소속(67명)이 난립했으나, 제5대 총선 결과 4개 정당만이 활동하게 되었음.

-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통합러시아당」 비례대표 1번으로 등록함으로써 총선이 푸틴 대통령 개인과 정책을 평가하는 분위기로 변질되어 국가두마 선거 의미가 쇠퇴하였음.

- 또한 선거기간 동안 크레믈린의 대중매체 장악, 부정투표, 투표자 매수, 「통합러시아당」에 대한 찬성투표 유도, 야당 인사 체포·구금 등과 같은 각종의 부정선거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음.
 - 이는 러시아에 공정한 선거제도와 법치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음.

- 이번 러시아 총선에 대한 해외 선거감시단의 평가는 대러 관계에 대한 긴밀도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났음.
 - OSCE와 EU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는 러시아 총선이 “공정하지 못했고 OSCE와 「유럽이사회」의 민주적 선거를 위한 다수의 공약과 기준들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공동성명(12.3)을 발표하였음.
 - 반면 러시아도 회원국인 SCO의 옵서버들은 “본 감시단이 관찰한 선거구에서 국가두마 대의원 선거는 적법하고, 자유롭고, 공개적이었으며, 기본적으로 러시아 법률의 요구조건들과 국제적 의무들에 상응했다”는 성명(12.3)을 발표하였음.

IV. 러시아 대내외정책에 미칠 영향

1. 대내정책에 미칠 영향

- 연임을 한 푸틴 대통령은 헌법상 재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후계구도에 대한 러시아의 대내적 관심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왔음.
 - 푸틴 대통령의 후계자로는 최초의 민간 국방장관 출신 이바노프(Sergei Ivanov, 1953년 생) 제1부총리, 크레믈린 행정실장 출신인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1965년 생) 제1부총리, 연방재정감시국장 출신인 줍코프(Viktor Zubkov, 1941년 생) 총리 등이 거론되어 왔음.
 - 푸틴 대통령은 총선 이후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만나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를 지지한다는 자신의 의중을 밝혔음(12.10).

- 푸틴 대통령이 자신과 같은 고향(상트 페테르부르크) 및 연방보안국(FSB) 출신으로 자신보다 한 살 아래인 이바노프 제1부총리 대신 13살이나 어린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를 후계자로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됨.
 - 이바노프 제1부총리는 업무능력과 충성도에서 푸틴 대통령의 최고 신임을 얻어왔으나 강성 인물임.
 - 반면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페테르부르크시 대외관계위원장(1991~1996) 시절부터 계속 측근에서 보좌해 왔으며 온순형 인물임.

- 또한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보건, 교육, 주거, 농업 등 4가지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음.
- 푸틴 대통령은 퇴임 이후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됨.

○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는 「통합러시아당」의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정식 추대(12.17)되었음.

- 푸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총리직을 수락하겠다고 밝혔음(12.17).
- 따라서 차기 대선 이후 러시아 정국은 푸틴 총리의 섭정 형식으로 주도되는 양상을 띠게 될 전망이다.

○ 제5대 총선 결과 친푸틴 정당들이 국가두마를 압도적으로 장악했기 때문에 그동안 대외적으로 비판받던 ‘권위주의적 민주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 정부는 크레믈린의 총선 관련 부정행위와 해외은행으로 유입된 크레믈린 고위 관계자들의 자금을 추적하던 몰도바 출신 「뉴타임스」기자를 몰도바로 국외추방(12.16) 했음.

○ 그러나 총선시 부정선거 등으로 인한 큰 사회적 혼란은 전망되지 않으며, 국제고유가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는 급속한 경제 회복과 발전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2008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관계없이 푸틴과 그의 팀들이 러시아 정치 및 거시경제를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음.

- 2008년 러시아 대선(3.2)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푸틴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 러시아 대선에는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 이외에 주가노프(Gennady Zyuganov) 「공산당」 당수, 극우민족주의자 지리노프스키 「자유민주당」 당수를 포함하여 최대 25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됨.
 - 여론조사(2007.12말)에 의하면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의 지지도가 계속 상승해 50%대를 육박하고 있음.

- 차기 대선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푸틴 총리의 권력구도가 이루어지더라도 향후 러시아의 정치·안보군사·경제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강한 러시아’ 건설을 위한 기존의 정책들이 지속될 전망이다.

2.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

- 이번의 총선 결과는 러시아의 기존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실용주의, 예측성, 국제법의 우위라는 세 가지의 대외정책 원칙을 견지하면서 전방위 외교정책을 계속 수행할 것임.

- 러시아 정부는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국제범죄·마약·환경·조류독감·지구 온난화 등 범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대처를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비대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자국을 ‘주니어 파트너’(junior partner)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 줄 것을 계속 주장할 것임.
 - 러시아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는 미국 정부는 러시아 대선에 대해서도 공명선거를 촉구할 가능성이 큰 바, 이를 둘러싼 미·러 간 신경전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국이 동유럽에 구축하려는 미사일방어(MD)체제, 이라크와 이란 문제, 러시아의 민주주의 후퇴 등을 둘러싼 미·러 간 갈등도 지속될 가능성이 큼.

- 러시아는 안보를 확보하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역내국가들과 심도있고 균형된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동북아정책 목표를 견지할 것임.
 - 이를 위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적극 지원하는 등 중국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관계와 전략적 상호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일본과는 양국의 이해에 대한 상호 존중을 기초로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경제관계 심화를 통해 북방 4도 등 정치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것임.

- 러시아 정부는 이번 총선 이후에도 한국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기초로 실질협력 증진 및 호혜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러시아 정부는 ‘2013년까지의 극동·자바이칼 사회·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23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이 때문에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송유관 등 인프라 건설, 철도 물류망 개발 등을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 또한 그동안 한·러 우주협력의 결과,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호’에 탑승(2008.4)하여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8일간 머물 예정이고, 2008년 말에는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이 발사될 계획임.

○ 러시아 정부는 이번 총선 이후 북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임.

- 러시아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핵프로그램 신고나 핵폐기 과정에서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 북·미간 타협 유도를 위해 중개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제5차 『조·러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 위원회』가 평양에서 개최(2008)되면 양국 경제관계 발전의 장애요인인 북한의 대러 채무(약 80억 달러) 문제를 재협상할 것이나, 러시아가 대부분 탕감을 하지 않는 한, 양국간 입장차와 환율문제 등으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 그러나 북한·사할린주 의정서(2007)에 따라서 북한 노동자 3,500여명이 러시아 사할린으로 보내져 건설, 벌목, 수산가공, 농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협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V. 정책적 고려사항

- 상기와 같은 러시아 제5대 총선 결과와 이것이 러시아의 대내외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대러 및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강력한 리더십에 기초하여 러시아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급속히 회복·발전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러시아 정부의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대선(2008.3.2)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푸틴 총리라는 지도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외정책 및 한국중시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 푸틴 대통령은 이바셴초프(Gleb Ivashentsov) 주한 러시아대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달한 친서(2007.12.21)에서 “대통령 당선자 임기 중 양국 관계가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 또한 푸틴 대통령은 이 친서에서 자신의 임기(2008.5) 중 러시아를 방문하도록 초대하였는 바, 우리 정부는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후 방러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1998.2) 직후 미·중·일을 방문하였으나 러시아 방문을 지체시킴으로써 정보외교관 맞추방 사건(1998.7) 등이 발생하여 한·러수교 이후 최대의 외교위기를 경험한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임.

○북핵문제는 ‘2·13 합의’와 ‘10·3 합의’ 등으로 평화적 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북한이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거부하고 있어 2007년 말 현재 ‘매우 중대한 국면’에 직면해 있는 바,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를 통해 북한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를 촉구해야 할 것임.

- 또한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및 각종의 대북 채널을 통해 북한이 체제보장 확보와 경제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한반도 포럼’이 개최되면,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시 러시아가 보장국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능화 단계가 종료되고 핵폐기 단계로 진입하면 남북한·미·중 4국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한반도 포럼’이 개최되면 이로부터 소외된 러시아는 매우 큰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한반도 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평화협상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평화협정 체결시 보장국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러시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한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로 향후 한·러간 경협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에 채택(2005.11.19)된 ‘한·러 경제

통상협력 행동계획'(Action Plan)의 이행 정도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작업을 해야 할 것임.

- 러시아 정부가 2013년까지 추진 중인 '극동·자바이칼 사회·경제 개발 프로그램'에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교통, 원유·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자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東北亞区域合作的な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연례 정세 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근,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근,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근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5차 회의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박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13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7(代), 팩스 : 901-2543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7년 12월 일
발행일 2007년 12월 일
